

보도일시 (인터넷, 지면) 2023. 11. 28.(화)
10:00(국무회의 시작시)

배포 2023. 11. 27.(월) 오후

산출량 중심의 어업관리체계 구축으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실현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11월 28일 국무회의 통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연근해 불법어업 근절과 체계적인 수산자원 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이 11월 28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올해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수산관계법령에 근거해 운영해 온 금어기·금지체장·어구·어법 등 복잡하고 다양한 종전의 어업규제를 과감히 폐지·완화하고, 어업인들의 조업 편의와 실효성 있는 자원관리를 위해 어업관리 방식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지난 8월 2일 수협, 어업인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민·당·정 협의회를 가지고, 이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은 이러한 연근해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을 시행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 제정안에는 산출량 중심의 효율적인 어업관리 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겼다. 먼저, 모든 연근해 어선에 대한 위치발신장치 작동과 어획 보고를 의무화한다. 또한, 모든 연근해 어선소유자는 지정된 양륙장소를 통해 수산물을 양륙하고 실제 양륙 실적보고를 마친 후 어획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를 유통업자 등에게 전달해야 한다.

아울러, 동법 제정에 따라 타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어획실적, 위치발신장치 작동 의무 등의 중복 규제를 없애기 위해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의결되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동법 제정을 통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어업관리체계 전환을 통해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 지도교섭과	책임자	과 장	김원배 (044-200-5560)
		담당자	사무관	정재현 (044-200-5561)

참고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 제정안 주요내용

□ 제정 목적

- (불법어업 근절)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한 국제사회의 규범화 논의* 등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연근해 불법어업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 필요
 - * 책임 있는 수산업 행동규범, 국제행동계획(IPOA-IUU), 항만국 조치협정(PSMA) 등
- (기존 어업규제 완화) 다양한 투입요소 중심의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산출량 중심 관리를 통해 어업인들의 불편 해소 필요
- (체계적 수산자원 관리) 조업 위치별 어획량 파악을 통한 수산자원 평가 고도화 및 불법어획물의 유통 차단을 통한 체계적 수산자원 관리 필요

□ 주요 내용

- (위치발신장치 작동) 어선소유자는 항해를 하거나 조업을 할 때에는 어선의 위치를 자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작동 의무화
- (어획 보고) 조업일 마다 어획 실적 또는 전재 계획·실적 등 보고 의무화
- (양륙실적 보고) 어선소유자가 수산자원을 양륙한 후에는 실제 양륙한 실적을 보고
- (어획확인서 발급) 어선소유자가 양륙실적 보고를 완료 후 어획 확인서를 발급 및 수산물 유통 시 어획확인서 전달 의무화
- (어획증명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물 수입 시 해당 국가 정부기관이 발급한 어획증명서 제출 의무화

